

이재명 정부 실무 중심 라인에 호남 인재 속속 배치

산자부 1차관 문신학·기재부 2차관 임기근·외교부 1차관 박윤주 발탁
3~4명 이름 추가 거론...국장급·대통령실 비서·행정관 등도 대거 배치

이재명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에 호남 인재가 속속 배치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 주요 부처 차관급·국장, 대통령실 비서·행정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라인에도 호남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실용·실무 중심'의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인사들의 맹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따르면 현재 장·차관 인사 추천·검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대통령실 추가 인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해남·조선대부속고) 산자부 대변인, 기재부 2차관에 임기근(해남·송원고) 조달청장, 외교부 1차관 박윤주(보성) 주아세안대표급 공사 등이 발탁됐고 주요 부처 차관 임명 과정에 호남 인사 3~4명의 이름이 추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각 부처 핵심 실무자이며 '일 중심'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호남 인사 발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각 부처 주요 실국에도 호남 인사 배치를 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지만 억척질을 받았던 호남의 아픔에 대해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실무진에도 호남의 사정에 밝은 인사들의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학 차관 임기근 차관 박윤주 차관

이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광주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지원,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조속히 해결하거나 관련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화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의 재가동·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 등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성락(장흥) 안보실장·황인권(보성) 경호처장·김용범(무안)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실장 인선 과정에서도 호남 인사들도 중용됐다.

또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담양) 보좌관이 대통령실 실무진 인선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고, 김 보좌관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실무진에도 광주·전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과거에는 지방선거·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1기 청와대 인선에 몰려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무진에 정치 성향이 짙은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의 대통령실 입성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서 더욱 일로 평가받았던 더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어민주당 관계자와 캠프 실무진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의 한 인사는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일 중심의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권력 상징적인 '장관 몇 명'보다는 실무진에 얼마나 지역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 중요하고 효과도 클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도는 속속 진용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정부 '호남 실무 라인'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광주시는 대통령실 실무진에 인선된 광주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서

울사무소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인공지능 예산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정부부처로 영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대특검법 주요 내용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명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대상	11건 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② 국외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외 기물 파손 등 ③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외 표절 방해 시도 ④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감금 시도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⑥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혐의 ⑦ 선포 건의 및 금급사실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동·선전 ⑧ 무인기·광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 야기 및 이를 통한 내란·군사반란 시도 ⑨ 범인도주 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고사 또는 재판·수사 방해·지연 ⑩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⑪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16건 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삼보토건·우리기술 등의 주가인위적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 취득 ②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지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 제공 ③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유 수수 ④ 대통령 직무수행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 개입 ⑤ 경태군·건진법사 등의 국경개입·인사개입 ⑥ 이중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등 국정 부당 개입 ⑦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룡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부당 개입 ⑧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 개입,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 농단 ⑨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 개입 ⑩ 명태군 등을 통해 제20대 대선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개입 등 거래 ⑪ 제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등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⑫ 대통령 자위 및 대통령실 직원 이용에 사적 이익 추구 ⑬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운동 개입 ⑭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수사 고의·지연·은폐·비호 증거인멸·인멸고사 ⑮ 각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방해 ⑯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 방해	8건 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②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③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④ 이중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⑤ 제4호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⑥ 이중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⑦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 ⑧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검 규모	최대 267명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 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최대 205명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최대 105명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검 임명 기간	최장 11일 17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최장 11일 17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최장 12일 14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3특검' 의결

10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의 집중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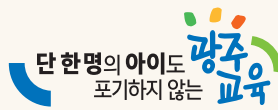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함께 지켜야 할 아이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 시 2025. 6. 19.(목) 14:00~16:00
장 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북구 능안로 30번길 5)
주 제 1부 - 표창원 작가 강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 표창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대 상 초·중고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광주광역시서서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